

발행인 칼럼

충남교육청, 신축학교 시공 철저한 감독 필요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충남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해 신축된 혜성초등학교·유치원(이하 혜성초)이 올해 개교했지만 곳곳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곳 학교공사는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요구가 이뤄졌지만 개교 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과 관리 감독 기관의 안일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아주 작은 문제점에도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어 모든 부분에 표준 설계에 따라 철저히 진행됐어야지만 이 학교 시공에는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소임을 저버린 채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혜성초의 화단 석축은 돌과 돌 사이가 터무니없이 벌어져 있으며, 하단부는 공간이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됐다.

벌어진 돌 틈에 ‘눈 가리고 아웅 식’ 흉으로 채웠지만 이마저 우기시 빗물에 흘러내려 붕괴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감독 기관인 당진교육지원청은 개교 전 이 같은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뭉치 모르는 천방지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학생들이 울타리 밖이라 해도 호기심이 발동하면 어디라도 달려가며, 이 문제의 석축을 오르고 내리다 돌 틈 사이에 깔 수도 있고, 돌을 지탱해주는 흙의 유실로 붕괴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독 기관은 예상하고 감독했어야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해 이뤄진 구조물 설치마저 바르게 시공되지 못해 안전위험을 부를 수 있어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주변에는 공사용 컨테이너와 공사 자재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공사는 개교 직전까지 학교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주민 민원이 쇄도해 취재진이 문제점을 지적, 조치했지만 개교 후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교시키기만을 위해 무리한 공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은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

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결과로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

특히 취재진은 당진교육지원청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을 이용,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학교방문을 요청했지만, 주말 시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평일 방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방문 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내공간에 대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 식’ 점검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감독 기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혜성초 건물과 시설물 등이 표준 설계와 시방서에 의해 제대로 사공되었는지에 대해 발주처는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기관과 시민단체 및 언론을 초청, 정밀진단하고 문제점에 대책을 마련, 그 안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방관한다면 발주처는 어린 학생들을 불모로 국민 혈세를 시공사 주머니만을 채워줬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수업 방해 학생 등 제지·분리지도법 실현을 환영하며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업 방해, 공격 행동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제지·분리·지원법안이 지난 3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공격 행동 학생에 대한 방어, 제지권 부여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미적용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학생 인계 요청 가능 명시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운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법적 기구인 학운위 구성과정에서 위원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시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교육계의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 운동, 임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된 데 대해 환영한다.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해도, 심지어 교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교사는 제지·분리 지도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며, 이 같은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해당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공격,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 등의 분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마련 등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제도가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교육청이 별도 인력,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교권 보호 강화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꼼꼼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TN 논란

자본주의 4.0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매스컴에서 자본주의 4.0시대에 대한 역사와 세부적인 내용,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시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본다. 이는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서구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면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20세기 초 자유 방임의 고전 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 1.0으로 설명한다.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저자는 자본주의와 자유 무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 경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주장했다.(자유 방임주의 경제), 두 번째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신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가인 케인즈(1883-1946)의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자본주의 2.0시대로 본다. 세 번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3.0으로 분

류한다.

이 시대는 사상 최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을 짙게 드리웠다. 네 번째 자본주의 3.0시대의 탐욕과 경제계층의 이분화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인정하되 고용과 나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4.0시대로 말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나눔, 배려, 사회 구성원의 감동 등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상생을 위한 협력 고용 확대 빈곤층 해소 계층 간 갈등 해소 복지 확대 지도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코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시대에 사는 우리, 개인, 기업,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5.0시대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올까?

만물창고

지속적 혁신의 정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신동호
CTN/교육타임즈 논설위원

중국 고대 은(殷)나라의 시조 탕왕(湯王)이 남긴 유명한 문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은 현대에도 큰 울림을 주는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탕왕이 매일 세수를 할 때마다 새기고 다짐했던 삶의 철학이다. 이 정신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 조직,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의 본성과 초심의 어려움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 본성상 쉽지 않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처음의 다짐이 흐려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일신우일신의 정신이다.

개인, 조직, 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일신우일신의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과 사회의 발전에도 깊이 연결된다. 현대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일신우일신은 이러한 경영 철학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원칙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적응

오늘날 우리는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전과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일신우일신의 정신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

결국, 일신우일신은 개인과 조직,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모두가 일신우일신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오늘,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지역혁신 중심 RISE 사업, 충남도립대-청양군 ‘맞손’

지역 맞춤형 교육과 실무형 인재 양성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형 인재 육성

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명규)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9일 청양군청에서 ‘충청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남도립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혁신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직접 협력,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산업 연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RISE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되고,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은 지역 경제 및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과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두호 기자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D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앤코리아(주)

뉴스제보:041-631-8114 / 광고문의: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삼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월 1만 2000원 / 자매지 월간충남, 충청타임즈, CTN방송

CTN자매지로 별도의 특수주간 신문 등록 및 사업자가 있으며,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